

## 開放化時代의 에너지政策方向



動力資源部長官 李 鳳 瑞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지난 5月20日 파레스호 텔에서 에너지經營人 懇談會를 가졌는으며 이 자리에 李鳳瑞 動力部長官이 特別演士로 招請되어 “開放化時代의 에너지政策方向”에 對한 講演을 하였는바 다음에 이 講演의 全文을 紹介한다.

### 序 言

韓鳳洙 會長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계신 韓國에너지協議會 회원여러분, 에너지業界에 계신 여러분, 또 학계에 계신 여러분 모두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너지協議會가 에너지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두 모시고 조찬회를 가지면서 저에게 첫 招聘演士로서의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開放化時代의 에너지政策 方向”이라는 제목은 매우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그 內容을 엄격히 생각해 보고 分析해보면, 결코 쉬운 課題가 아니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課題가 아닌 것입니다.

요즈음 開放化時代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論議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開放의 개념부터 定立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 저는 지금 두가지가 섞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政府의 간섭으로부터의 開放, 즉 民間主導型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Closed Economy에서 Open Economy로 나가는 것, 즉 협소한 國內市場에서 世界市場으로 나간다는 概念의 開放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開放政策이다, 經濟가 開放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두가지가 섞여서 쓰여지고 있으며, 말하는 사람의 그 당시의 觀點에 따라 어떤 때는 民間主導型이 더 강조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Open Economy가 더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즈음 왜 갑자기 開放概念이 時事性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나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國內的으로도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나라 經濟가 그동안 크게 成長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政府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도 自律적으로 커 갈수 있는 民間主導型 주체가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經濟의 成長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겪어왔던 赤字經濟로부터 이제 黒字經濟로 전환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經濟와는 직접적인 關係가 없습니다마는, 요즈음의 政治開放 분위기가 분명히 經濟開放을 좀더 크게 그리고 시의에 부합되게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國內의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國際적으로도 현재 開放이라는 것이 상당한 인기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우선, 레이건이 지금 美國 大統領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Reaganomics라는 用語가 經濟學者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理解하는 內容이 다름니다마는 그 골자를 몇가지 要約 해 본다면 작은 政府, Free Competition, Free Individual Economy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開放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鄧小平이 中共을 開放化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政治의 開放이 있고 經濟의 開放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開放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政治와 經濟의 開放이 섞여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開放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國內뿐만이 아니라 海外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開放主義, 開放經濟, 開放政策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無批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開放主義 또는 民間주도형은, "Free Economy는 좋은 것이며, 經濟理論적으로도 그러하며, 좋다는 것에는 疑問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歷史를 통해서도 계속 그러해온 것이며 또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정도에까지 지금 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熟考해 보면 政治가 그렇듯이 經濟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開放主義 또는 民間주도형 經濟理論이 과거에 성시를 이룬 때가 그렇게 흔치 않았다고 보며, 조금 더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經濟는 開放되어야만 된다. 民間主導型은 반드시 좋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 開放主義의 歷史의 背景

經濟史的으로 본 개방의 歷史는 역시 經濟理論의 선조라고 불리우는 Adam Smith의 「國富論」으로부터 始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國富論」에서 民間主導型의 경제이론을 Adam Smith가 이야기할 때, 自由競爭體制를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보이지 않는 손, 즉 invisible hand에 의해서 모든 것은 自然的으로 最適의 解決策을 찾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18世紀 중엽에 책으로 發刊되어 그 후 크게 脚光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이것이 英國에서 産業革命과 아울러 英國 經濟의 지속적인 번영을 초래케 하였으므로, 그만큼 더 人氣를 누릴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英國과 달리 産業革命에서 한발 뒤떨어진 獨逸은 반드시 Adam Smith의 理論이 옳다고는 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Friedrich List같은 사람은 開放主義 이론이 英國에서 상

당히 유행되고 있을 때 獨逸같은 經濟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Protectionism 즉 保護主義가 經濟體制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하튼 Adam Smith의 理論은 1920년까지 폄미했으며, 이것이 決定的으로 시험을 받게 된 것은 1930年代의 世界的인 공황 때입니다. 世界的인 공황하에서 經濟라는 것이 invisible hand에 의해 스스로가 해결되는 능력을 반드시 가진 것이 아니다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1930年代에 Keynes가 소위 Keynes 理論을 주창했으며, 사람들이 이를 일컬어 Keynesian Revolution이라 하고 있으며, 이의 골자를 開放과 關連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經濟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스스로 解決策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政府의 적절한 關與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나고 共產圈을 중심으로 또는 自由陣營에서 經濟開發政策을 세웠을 때 우리는 두가지 理論이 병행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共產主義는 그 나름대로 統制經濟原則을 선택했고 民主主義 陣營은 自由開放主義 경제원칙을 선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陣營만 하더라도 低開發國家의 經濟開發에는 반드시 자유주의, 소위 Adam Smith의 理論이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읍니다. 이른바 計劃經濟의 이론, 이것이 오히려 經濟開發의 촉진에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사실상 印度와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1次 5個年計劃, 2次 5個年計劃 등을 수립했던 것을 우리가 그 모델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당시의 경향에 따라 1, 2차 5개년계획을 樹立했고, 第6次計劃을 지

금 論議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 霧圍氣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 2차와 같이 經濟計劃 자체가 Bible로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던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經濟計劃이 의미하는 것에는 큰 變化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經濟計劃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美國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Reaganomics를 중심으로한 Free Economy가 제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최근의 분위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1950年代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만 하더라도 美國에도 하버드를 중심으로한 소위 Keynesian 학파와 시카고大學을 중심으로한 시카고學派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하버드를 중심으로한 Keynesian 학파는 필요할 때에 政府의 간섭은 어느정도 正當化가 된다고 하는 것에 基本的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實質的인 行政의 시책에서 그러한 概念의 차이가 나타난 例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케네디 大統領이 大統領으로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은 것은, Bay of Pigs라는 여러가지 軍事的인 시험도 있지만, 經濟面에서 제일 큰 시험은 製鋼業界가 政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의 담합적으로 價格을 引上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製鋼業界가 정면으로 충돌했읍니다.

만일 自由經濟主義를 經濟政策으로 반영했다면 製鋼業界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인상한 價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 당시 케네디 行政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읍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引上 理由가 없는 가격인상을 했다고 하여 그 인하를 強용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價格

인상이 강행되었을 때 케네디정부는 여러가지 行政的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결국은 價格을 다시 引下시킨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資本主義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美國에서도 '60년대까지는 분명히 자유경제와 통제경제의 이론과 실체가 병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접어들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레이건大統領은 최소한의 행정통제를 통한 開放主義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의 이러한 經濟原則이 그 나름대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비록 政府豫算과 貿易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적자를 실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經濟成長, 雇傭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또한 好況의 기간이 제일 긴 성공적인 경제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 自由經濟에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蘇聯이나 中共과 같은 통제경제의 나라들이 과거의 실패를 자인하고 자유경제로 돌아오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도 自由經濟理論의 가치를 크게 신장시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歷史와 최근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開放主義 經濟理論이 歷史的인 趨勢로 보나 世界的인 趨勢로 보나 현재 가장 軸점이 되고 있는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 國家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항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옳은 이론이었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70년대 英國의 經濟가 어려웠고 독일의 經濟가 상당히 번성했을 때 Adam Smith를 배출한 英國은 오히려 保護主義의 價値性을 이야기

했고, Friedrich List를 배출한 독일은 Adam Smith의 自由經濟理論이 옳다고 했던 것만을 보더라도 이 이론은 역시 그때 그때의 자기 필요성에 따라 적용, 주장 그리고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단정적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開放主義 또는 民間主導型 경제체제는 경제기반이 풍요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싸움에서 그리고 경제체제에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서는 편리한 경제이론이고 또한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政策

그러면 이러한 自由經濟体制의 性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즉 그동안의 에너지政策이 어떻게 되어 왔으며, 요즈음 유행되고 있는 開放主義 雰圍氣에서 앞으로의 에너지政策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분야 보다도 政府의 干涉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반박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을 비판하는데 있어 開放自体를 尺度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政策의 基本目標가 開放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너지政策의 基本目標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에너지需給의 安定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價格의 安定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目標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方法과 手段을 동원하는 것이 좋느냐에 대해서

## 에너지經營人 懇談會

### 招 請 講 演

더러는 開放政策이, 더러는 統制政策이 좋을 것이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이 비록 완전한 開放主義 原則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의 결과에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하고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1, 2차 石油波動을 겪으면서도 지난 15여년간 거의 연 10%의 실질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에너지는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단이 어떠한 간에 그러한 經濟成長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정책수단이 있다면 과히 크게 나무람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開放”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Government Control과 Government Red Tape가 서로 혼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政府의 干渉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民間 主導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政府의 Red Tape(煩文纏禮)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行政의 簡素化로써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 政策의 方向轉換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에너지분야를 간섭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國內外的 추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기본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開放化時代의 에너지政策

時代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與件이 변해갑니

다. 이러한 變化속에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手段이 비록 그것이 手段일 망정, 그것이 가장 좋은 代案이었는데에 대해 한번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변화된 상황하에서 과거의 政策手段이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며 앞으로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수단을 동원했을 때 좀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다면, 새로운 方向으로 轉換하는데는 서슴치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政府가 에너지政策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했느냐 하는 것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에너지政策의 基本 方向 또는 基本 目標은 需給 및 價格의 安定에 있습니다. 이 수급의 안정을 위해 政府가 동원한 수단을 물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事業의 許可를 統制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Free Entry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일단 에너지산업체에 들어온 분은 다른 경쟁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保護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業界마다 다소 다릅니다. 우리 石炭業界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호 측면에서의 Free Entry의 간섭은 거의 하지 않고 申告制로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石油業界, 가스업계 및 상당한 다른 업계에는 Free Entry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適正施設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투자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업주마다 販賣區域의 統制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煉炭의 경우로, 현재 판매 구역이 설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구역에 3업체, 2업체, 심한 경우에는 1업체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기본적

인 이유를 보면, 공급이 부족할 때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구역을 책임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특정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키 위한 것이 아니므로, 市場의 구역판매권을 설정하는 것도 결국 需給安定을 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정책수단으로 우리가 동원하는 것은 수출입의 허가를 통해서 外國商品을 統制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石油業界이며, 이는 소위 소비지정제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수단, 즉 Free Entry를 統制하고, 어느정도의 Market Zone을 인정해 주며, 그리고 수출입을 統制하는 것으로서 수급안정의 목표를 기하는 것 이외에 價格安定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을 말씀드리면, 우선 最高價格制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石油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稅後 10%선의 이윤을 더러는 보장해준다고 하고 더러는 더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계산해서 정리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石炭의 경우에는 石公의 Break-even Point 수준에서 전체가격의 Ceiling으로 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供給과 需要의 기본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와는 달리 통제 가격을 정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가격 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價格의 安定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가격에는 다른 한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政策目的의 달성을 위해 어떤 특수한 제품의 가격을 일부러 저렴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電氣의 경우 농사용의 電氣料금이 일반산업용보다 50%나 저렴한 것은 농민들을 돕는다는 정

책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또 石油 제품의 경우, 輕油를 유난히 저렴하게 하는 것은 경유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연료이기 때문인 것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가격 압력을 가능한한 줄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需給의 安定을 기하기 위한 政策手段이, 開放을 해야 되는 분위기 그리고 개방을 할 수 있는 경제여건에서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價格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原價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여기에는 불필요한 보조가 있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원가를 떠나 너무 싸게 또는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價格이 原價와 격리되어 산정되는 상황하에서는 국내 업체간의 자유스러운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경쟁속에서는 소위 Free Entry를 없애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人爲的으로 우리의 입장에 맞춘 價格構造를 유지하다 보면 국제가격 Pattern과도 전혀 같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입을 허가하려해도 國際價格과 國內價格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입의 통제를 풀기조차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石油제품의 경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아무도 수입을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제품은 누구나 다 수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石油와 같은 연산품의 경우에 한 제품이 지나치게 수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나치게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 제품만의 Market Destruction 문제가 아니라 精

油業界 제품 전체를 뒤 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수입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輸出入을 開放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체제를 최소한 상대적인 價格構造에 있어서 國際交易이 가능한 양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수출입을 자율화하기 위해 내일 당장, 가격체제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농사용의 電氣料금이 한꺼번에 두배가 될 것이고 경유값이 일시에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버스요금의 인상을 유도하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價格構造의 改善을 이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電氣料金の 引下調整時 과거에는 農事用 電氣料金を 비록 그것이 원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입장과 정치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계속 같은 비율로 인하시켰습니다만, 지난번 조정시에는 農業用 電氣料金の 인하를 거치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 제 나름대로 상당히 망설였었습니다만, 動資部를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셨고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행에 큰 비판을 받지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價格政策을 油價와 電氣料金에도 계속 준용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에너지가격체제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에너지政策의 問題點과 對策

政府가 지금까지 시정해온 價格政策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石油價格에 관한 것입니다. 石油價格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의 근간이 되어있고 그리고 國際油價가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한 國內油價를 안정체제로 유지해 나가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따라 國內油價를 책정하는데 있어 原油價 자체가 실토입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실토입가가 15달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8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관세 10%와 석유사업기금이 포함되어 종합적인 Package의 가격으로 國內油價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國際油價가 상당히 인상되더라도 국내유가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國際油價가 18달러까지 인상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달러까지 올라가면 관세 10%로 감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21달러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동안의 基金을 가지고 약 2년정도는 버틸 수 있는 안정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최근 元貨切上이 계속되는 여건하에서 石油事業基金이 예기치 않게 지나치게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숫자를 보더라도 배럴당 거의 8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2달러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비해 너무나 높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다시말해 國際原油價가 향후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원화의 절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石油事業基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石油事業基金의 규모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가능한한 國內油價를 國際油價와 상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까지 접근케 한다는 의미에서 油價引下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관계부처간 합의가 된다면 國內의 油價引下는 단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貨의 切上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Pace로 움직인다면 환율과 연동하는 유가체제를 마련하여, 환율의 절상폭을 보면 유가인하의 폭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販賣區域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販賣區域 제한은 연탄분야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는 역시 販賣區域의 독점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판매구역은 과거 연탄의 공급에 기본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공급책임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구역제한이 설정되었읍니다. 이제 그러한 공급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우리가 해방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이제는 競爭體制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煉炭市場 구역도 최소한 단일구역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한 廣域化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품의 輸出入 自由化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어느정도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자율화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격만 맞으면, 즉 가격만 외국과 Pattern이 비슷하면, 상대적인 Pattern입니다만, 수출입이 완전히 개방되어도 되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수출입을 우리가 뒀을 때 수입제품이 국내제품보다 결정적으로 저렴하여 국내에너지업계에 존재의 위협이 된다는 상황화에서도 輸出入의 自律化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에너지政策의 기본 목표의 첫째가 需給의 安定이라고 보고 수급의 안정은 어느정도 國內의 供給基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수입을 터서 비록 어떤 시점에서 좀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업계의 倒産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에너지공급기반을 완전히 교란시킨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憂慮性이 있다 하면 그때는 수출입은 하되 어느정도 제한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한된 수출입인 것입니다.

한편 價格 競爭力이 없다고 하여 항상 100% 보호하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너무 공급하는 측면만 보호하다보면,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供給해야 된다는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國內價格이 국제가격보다 비싸서 1대 1의 경쟁에서 국내 업체가 불리한 여건에서라도 어느정



도의 開放을 통하여 成長을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수입과 국내 공급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정책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 20-30% 정도는 개방해서 우리 상품보다 유리한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소비지정체주의의 기본원칙에 다소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또한 100이라는 것이 국내에 필요할 때 100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장치까지 생각하여 130이라는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輸出入의 自律화 이것을 政策手段으로 동원하기까지는 우리의 가격 Pattern부터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중 당장 전반적으로 적용될 그러한 정책수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輸出入을 自律화한다고 할때 국내업체의 Free Entry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반드시 같이 가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외국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업체의 自由競爭을 왜 막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당시의 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여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을 트는 순간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 분야의 제품이 國際價格과 비교해서 싸냐 비싸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國際價格보다 저렴한 제품에 대해 수출입을 트면서 Free Entry를 인정하라고 하면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가격보다 저렴한 물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國內價格이 저렴한데 무엇때문에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형식적인 수입이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제품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입제품이 들어온다는 사전경고를 하는 역할은 될 망정, 당장 물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完全한 開放이 가능하지 않은 수출입 여건하에서 새로운 업체의 Free Entry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 업체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國際價格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고 할때, 새로운 업체의 인정은 별 뜻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싼 물건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競爭力을 向上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업체를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시켜서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그리고 1대 1로 국제 경쟁력이 생겼을때, 수출입의 완전한 자율화와 국내업체의 완전한 Free Entry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 結 語

지금까지 開放時代를 맞이해서 에너지政策手段이 어떻게 동원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제 나름

대로 골자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보면, 들으신 분에 따라서는 겨우 그것 밖이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자칫하다가 상당히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産業은 經濟를 끌고 나가는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산업에 있어 需給 및 價格政策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그저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것인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혹시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쪽저쪽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需給 및 價格政策은 에너지政策 목표

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자신이 생겼을 때에 한가닥씩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걸음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다소 정도가 약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게 가는 것 그러나 분명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英國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Marshall은 “經濟는 스스로 飛躍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警句가 우리의 에너지政策方向을 앞으로 인도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히 開放하는 民間主導型으로 나간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